

고하의 정치경제사상: 우파 민족주의 독립운동가의 합리적 경제개혁사상

정진영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1. 서론

고하에 대한 지금까지의 학계 관심은 거의 전적으로 두 가지 주제에 집중 돼 있었다.¹⁾ 첫째, 일제치하에서의 독립운동에 관한 것이다. 고하는 민족의 지적 능력의 향상과 단결력 강화가 독립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교육과 언론을 통한 계몽과 민족의 자강운동에 매진했다. 3·1운동의 민족사적 의의를 누구보다도 소중히 생각하면서도, 고하는 3·1운동의 실패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 그것은 민족의 힘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었고, 고하는 무엇보다도 교육문화운동을 통한 민족의식 고취와 민족적 자강이 독립 쟁취의 근본임을 깨달았다.

고하에 관한 연구의 두번째 주제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서 12월 30일 새벽에 피살 될 때까지의 정치적 행보에 관한 것이다. 고하는 일본 총독부가 항복 직전에 제의한 행정권의 수임을 거절했고, 몽양 여운형이 제안한 좌우합작도 거절했다. 건국의 방법에 관한 고하의 확고한 원칙 때문이었다. 고하는 연합국과 국민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권력을 수임하는 것에 대해 확고히 반대했다. 고하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중시하고 봉대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고하는 몽양이 공산당 세력에 둘러싸여 휘둘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몽양에게 경고했다. 고하가 몽양의 협력 제의를 거부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었다. 이후 고하는 좌파의 건준 및 인공의 공격에 맞서면서 한국 민주당의 창당을 주도하였고 우파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그리고 미군정의 현실을 수용하여 미군정 당국과 가까운 위치에서 자문하고 도왔으며, 신탁통치 반대의 회오리 속에서도 미군정 당국을 적대시하는 태도에 반대했다. 이로 인하여 고하는 자신이 임정추대를 그토록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임정의 지도자들과 차츰 멀어지게 되었다.

1) 고하 송진우에 대한 가장 권위있는 연구로 김학준이 쓴 『고하 송진우 평전: 민족민주주의 언론인·정치가의 생애』 (동아일보사, 1990)를 꼽을 수 있다. 그리고 <고하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의 홈페이지(www.goha.or.kr)에는 고하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연구논문이 업로드 돼 있다. 이 글의 바탕이 되고 있는 고하관련 자료는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가 펴낸 『거인의 숨결: 고하송진우 관계 자료문집』 (동아일보사, 1990년)이다. 이 글에서 인용하고 있는 고하의 글들은 모두 원출처와 상관없이 이 책에 수록된 것들을 미리 밝혀둔다.

고하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를 통해 간략히 살펴본 것처럼, 고하는 국내외의 정세 전개를 멀리 내다보면서 현실을 직시하고 행동하는 지도자였다. 국내에 머물면서 교육문화운동을 통한 민족의 자강을 독립운동의 방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이 있다. 조선을 일본의 식량생산기지와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기 위해 가혹한 식민지 수탈체제를 부과했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 너무나 안이한 태도를 했다거나 심지어 일제의 수탈에 기여했다는 부정적 평가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민족의 힘을 키우고 이를 통해 독립을 쟁취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와 반대로 독립이 자력이 아니라 외세에 의해 주어진 것일 경우에 부딪히게 될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고하는 내다보고 있었다. 몽양의 좌우합작 제의를 거부하고 미군정 당국과 협력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다. 그러나 고하는 세계의 대세를 읽고 있었고 소련체제의 전체주의적 성격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고하는 감성적으로 매력이 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보다 사태가 전개될 방향을 미리 내다보고 현실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했던 합리적이고 온건한 개혁가의 표상을 보여주었다.

고하의 이러한 성향은 사실 그의 경제관에서도 잘 나타난다. 고하는 일제 치하에서도 조선이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국민 개개인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자유권과 평등권의 관계와 같이 당시의 시대상황으로 볼 때 매우 앞선 이슈들에 대해서도 균형있는 생각을 피력하고 있다. 우리는 고하를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의 정치활동뿐만 아니라 경제문제에 대한 고하의 생각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갖고 쓰여졌다. 지금까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고하의 경제사상을 살펴보고 소개함으로써 고하에 대한 보다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위한 단초를 놓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해방 이후 전개된 한국경제의 진로를 고하의 경제사상을 연장한 선에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일제 식민지시대의 경제사를 둘러싼 논쟁에 고하의 사상을 위치시켜 보기 위함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들은 많은 후속연구를 필요로 한다. 고하가 살던 시대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고, 고하가 남긴 글들과 고하에 대한 기존연구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한편으로는 당시의 시대상황, 특히 식민지 경제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하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증진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2. 고하의 경제사상: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고하는 애국계몽주의 언론인이자 정치가였다. 따라서 경제문제는 고하의 1차적인 관심사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고하가 당시의 주요한 경제문제들에 대해 체계적인 글을 남기지 않은 이유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글들에서 당시의 주요 경제이슈들에 대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아래에서 우리는 고하의 경제사상을 네 가

지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고하가 남긴 글들의 내용과 그가 활동한 식민지 시대의 경제문제들을 고려한 선택이다.

1) 식민지 하에서의 경제발전

일제는 가혹한 식민지 수탈경제체제로 식민지 조선의 경제를 유린하였다. 조선을 일본에 대한 식량공급기지로, 일본 공산품의 시장으로, 그리고 만주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전략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적 객관적 조건을 바꾸지 않고 조선경제의 발전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독립 없이는 경제도 없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무장독립운동이 주창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와 농민의 조직화를 통한 공산혁명의 논리가 제기되었다. 조선의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식민지 상태의 타파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²⁾

고하도 식민지하 조선경제 피폐의 제1원인으로 이러한 “객관적 조건”을 인정했다. 그러나 고하는 이러한 조건을 탓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의 無力”도 탓해야 한다고 하면서 각 개인이 자립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을 역설했다. 1928년 1월호 조선지광<朝鮮之光>의 설문에 대한 고하의 답변 한 구절을 인용해 보자: “吾人は 조선인의 경제적 생활의 위축원인이 그 객관적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 큰 것을 부인함이 아니다. 물론 그것이 무엇보다도 큰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부족도 또한 일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여기서 객관적 조건이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가리킨다. 식민지배가 조선의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고하도 인정한다. 그러나 고하는 경제적 곤궁의 원인을 “오직 객관적 정세에만 돌리고 그 자체에 있는 내재적 원인을 등한시 하는 경향”을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태도를 “중대한 착오”라고 지적했다. 객관적 조건의 엄중함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타파되지 않으면 경제발전은 불가능하다는 인식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즉, 식민지 하에서도 경제를 발전시키고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고하는 생각했다. 우리는 아래 소절들에서 고하의 이러한 생각이 어떻게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났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식민지 하에서의 경제발전과 관한 고하의 이러한 생각은 독립운동의 방법에 관한 그의 생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즉, 고하는 무장독립운동이나 해외에서의 독립운동이 갖는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내에서의 교육과 언론을 통한 계몽운동과 경제발전을 통한 민족내부의 힘의 양성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고하는 식민지 체제 하에서 주어진 매우 좁은 활동공간이었지만 이를 이용하여 그가 생각하는 독립운동을 펼쳤다. 현대식 교육의 보급과 계몽운동을 통

2) 사실 이러한 논리는 식민지 시대에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어 온 민족주의 사관의 핵심적인 입장이다. 식민지 시대에는 경제적 발전이 아니라 종속과 착취가 있었을 뿐이다. 철도가 건설되고 농업 및 공업생산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는 모두 일제에 의한 일제를 위한 것이었지 결코 조선의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된다.

한 민족적 각성이 독립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언론사와 교육 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큰 관심을 쏟았다. 그리고 근면과 노력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도 독립을 위한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이래야 귀한 사람이요, 일 안하고 먹는 사람은 도적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를 권장했다.³⁾ 식민지 하에서는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식민지 극복을 위해 생산력의 발전이 이룩돼야 한다고 고하는 생각했다. 식민지 하에서는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식민지로부터의 독립이 최우선 과제이고, 이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 하에서도 경제발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독립의 쟁취와 자주독립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경제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식민지라는 불리한 객관적 조건에서라도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것이 독립운동이 될 수 있다. 고하는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논리를 연장해서 보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2) 교육과 경제발전

고하는 식민지 조선의 교육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1928년 『조선지광』의 설문조사에서 당시 조선이 당면하고 있는 긴박한 과제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 하나로 교육문제를 들며 어떻게든 “의무교육의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⁴⁾ 그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민족적 자각을 곧 독립에 이르는 길로 인식한 그의 독립관에 기초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독립을 위해서는 힘을 기르고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단결해야 한다고 믿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국민의 교육이 긴요하다고 생각했다. 고하는 민족적 단결을 누구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그는 이것이 안되는 이유를 “사상의 불일치”에서 찾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중의 자각과 문화정도[의]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그가 “문화운동”을 민족독립을 위한 “정치운동”의 준비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이러한 문화운동의 방안으로 그는 교육과 경제적 기반의 확보를 강조했다: “교육기관을 충실히 하고 신문 잡지 강습회를 통하여 지식을 계몽시키고 또 소비조합, 협동조합 운동을 일으켜서 경제적으로 지탱하여 나갈 길을 열어주어 그래서 문화적, 경제적으로 실제적 훈련을 해야” 문화운동이 독립운동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⁵⁾

그런데 고하는 교육이 민족의식의 고양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했다. 고하는 조선의 전통적 사고방식과 관습을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조선의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하는 일찍부터 조선의 사상개혁을 강조했는데, 1915년에 『학지광(學之光)』을 통하여 주창한 5대 사상개혁이 이를 잘 보여준다.⁶⁾ 첫째, “공교(孔敎)타파와 국

3) “농촌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는 이들의 의견,” 『朝鮮農民』 (총3호, 1926년 2월 12일).

4) 고하가 지적한 다른 두가지 당면과제는 “민족적 총역량의 집중”과 위기에 처한 “경제생활 문제”의 구제였다. “三個의 당면한 急務”(『朝鮮之光』 1928년 1월호), pp.57-58.

5) “無風의인 現下 國면타결책: 문화운동과 소비운동에 주력”(『三千里』 제4권 4호, 1932년 4월), p.88.

수(國粹)발휘”이다. 고하는 유교를 2천년 전의 중국사상으로 조선에 전래된 이래의 폐해를 지적하며 “공교타파는 자아보호의 정당방위요 시대요구의 긴급사무”라고 주장했다. 둘째, “가족제(家族制)의 타파와 개인자립(個人自立)”의 추구이다. 고하는 “개인권리가 존중되고 국가위력이 팽창한 현대”에는 전통적인 가족제가 “사회발전의 장애물”이 된다고 주장했다. 셋째, “강제연애의 타파와 자유연애의 고취(鼓吹)”이다. 고하는 강제연애를 계급결혼과 조혼의 폐해를 가져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파괴하고 사회의 발전에 해악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했다. 넷째, “허영(虛榮)교육의 타파와 실리(實利)교육의 주장”이다. 고하의 향교의 교육이 “관리만능(官吏萬能)과 문자일류(仗子一流) 문자”를 가르치는 허영교육으로 노동을 천시하고 자연의 법칙을 깨우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다섯째, “常識實業의 타파와 科學實業의 喚興”이다. 고하는 경제생활도 과학의 지식을 활용하고 시장경쟁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통적인 경제방식으로부터 벗어나야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하의 이러한 사상개혁론은 한마디로 조선을 근대사회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고하가 구체적 현실에서 제안한 것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그는 노동을 천하게 보고 죄악시하는 사회가 근대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노동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노동을 신성한 도덕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세상 사람이 다 노동을 신성하게 알고 놀고먹는 사람을 도적과 같이 사갈시하게 되는 날 이 세상은 고쳐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농촌 청년으로 하여금 노동하는 것을 최고 도덕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⁷⁾ 둘째, 농민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다. 고하는 농민들을 교육시켜 독립지사로 만드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농민의 과학적 사고가 향상될 때 농민이 사기를 당하지 않고 농촌이 잘 살게 될 것이며, 이것이 장차 민족적 힘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농촌청년을 위하여 하고 싶은 일은 그네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사상을 고취하여 갑자기 고상한 운동자가 되도록 하는 것보다 대체로 그네는 무지하여 전후 분별이 선명하지 못한 터인즉 우선 간이(簡易)한 국문을 가르치며 쉬운 숫자부터 알게 하여 농촌 청년은 물론 농민 전 부에게 다소라도 스스로 무엇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⁸⁾

셋째, 농민들의 도시유입의 위험과 농촌에서의 교육보급의 중요성이다. 고하는 당시 다수의 농민들이 서울을 구경하고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것을 우려했다. 그는 이른바 화려한 도시의 “전시효과”에 영향을 받아 도시로 몰려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를 경고하기 위하여 서울에 오면 “진고개와 종로와 같은 변화지를 보는 동시에 신당리 공덕리같은 빈민굴”을 꼭 둘러보라고 권고한다.⁹⁾ 빈

6) “사상개혁론” (學之光 제3권 1호, 1915년 5월 2일), pp.14-22.

7) “농촌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는 이들의 의견” (朝鮮農民, 총3호, 1926년 2월 12일), p.50.

8) “농촌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는 이들의 의견,” pp.50-51. 고하는 농민들이 유통배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고통받는 것으로 보고 이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역시 “간이한 과학적 지식을 보급케 하여서 일반 농민이 사물에 대할 때에 과학적 두뇌를 가지고 대하도록 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학보급과 종교선택” (『조선농민』 제5권 6호, 1929년 10월호), p.66.

민굴이야 도시마다 다 있겠지만 서울의 것이 가장 비참하다며 이곳을 보고나서 서울로의 이주를 판단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면서 고하는 시골 사람들이 서울에 왔을 때 또 반드시 보아야 할 것으로 교육시설을 지목하며, 이를 통하여 농민들이 “교육의 필요를 확신하는 동시에 자제를 많이 학교에 보내서 유위인물(有爲人物)을 많이 육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교육과 경제발전이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잘 알려져 있다. 교육이야 말로 한 사회가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가장 필요한 분야이고 투자에 따른 수익률도 가장 높은 분야이다. 그러나 교육은 “공공재”로서 이의 보급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당시 조선은 식민지하에 있었고 일제가 조선인의 교육을 위해 앞장설 리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하는 민족 지도자들과 더불어 “민족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초·중등 교육기관의 설립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물론 고하가 오늘날과 같은 방식으로 교육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했다고 판단할만한 글을 남기지는 않았다. 그러나 고하의 사상개혁론이나 농민교육론은 그가 근대적 교육의 보급이 조선의 경제발전을 위해 긴요한 일이었음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소작입법의 필요성

일제는 식민지 조선의 토지를 수탈하고 일본으로의 곡물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두 가지의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우선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국유지와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를 일제에 귀속시켰다. 그리고 지주제를 강화하여 곡물수출 증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이러한 조치들이 식민지의 소작인들에게 가혹한 압박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특히 소작관계가 법적인 문서보다 관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던 소작인들의 지위가 매우 불안하게 되었다.¹⁰⁾ 고하는 이러한 상황이 식민지 조선의 농업생산 증대를 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소작인을 보호하는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소작입법이 소작인의 삶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의 증가도 가져 올 수 있는 방안이라는 논리에 기초해서였다. 1929년 <朝鮮之光>지에 발표된 "소작입법의 필요"라는 글에서 고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생산자인 소작인이 항상 그 도(堵)에 안치 못하고 있는 이상 어찌 그의 최선의 노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특히 소작인의 지위를 보장할 만한 어떤 방법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소작법과 같은 것이 극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¹¹⁾

9) “시골 사람이라도 무슨 특별한 일이라든지 주의가 있어서 서울을 구경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고 다만 풍조에 팔려서 외형의 변화한 것이라든지 사치한 것만 취하여 구경한다면 그야말로 盲者丹青 구경 이상으로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허영심 사치심만 늘어서 如干한 악영향을 입지 않을 것이다.” “교육의 시설과 빈민굴에” (『別乾坤』, 1929년 10월호), p.65.

10) 소작관계를 말(구두)이 아니라 문서로 하는 경향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1930년에도 여전히 구두와 증서계약의 비율은 7.3:2.7에 머물렀다. 안병태, 『한국근대경제와 일본 제국주의』 (서울: 백산서당, 1982), p.309.

11) “소작입법의 필요성” (『朝鮮之光』 1929년 1월호), p.60.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부 지주들이 "소유권의 절대성"을 내세우며 강력히 반대했다. 소작입법은 지주들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하는 소작입법이 소작인이라는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가적 혹은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제한의 합법성을 제기했다. 즉, 국가적 또는 사회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수용을 허용하는 토지수용령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토지의 소유권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소작입법도 국가적·사회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고하는 "소작문제가 점점 심각화하여 그 영향이 농업생산의 消長을 좌우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적 견지로 보아서 그 대로 방임할 수 없는 일이고, 사회적으로 보아서도 어떻게나 해결치 아니하면 안 될 것이 아닌가!" 라고 반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하는 "조선의 소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과 "지주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지주들의 태도를 질타했다: "지주가 부질없이 목전의 이해에만 구애되어 영원한 장래를 보지 못함은 심히 한심한 일이다. 그러므로 지주는 무엇보다도 공존공영이라는 생각으로써 소작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소작인을 지도하여서 농업의 보다 더한 발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¹²⁾ 소작법이 소작인의 지위를 안정시켜 주고 이것이 농업생산을 증대시켜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익이라는 논리로 소작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개량주의적 개혁가로서의 고하의 경제사상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4) 자유권과 생존권

1925년 조선공산당이 창건되고 식민지 조선에서도 좌우의 이념적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물론 좌우가 합심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두가 공감했지만 독립운동의 방법과 독립 후 국가의 모습에는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념적 논의의 차원에서 이러한 차이가 뚜렷이 부각되는 지점이 바로 자유권과 생존권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느냐의 문제이다. 좌파는 착취와 불평등의 현실을 강조하면서 사회혁명을 통한 생존권 확보를 강조했다. 우파는 개인의 창의와 정치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자유권을 중시했다.

고하는 자유도 없고 생존도 없는 식민지의 현실에서 어느 한쪽을 극단적으로 추구하기보다 양쪽의 균형을 추구하는 균형 감각을 강조했다. 자유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경제적 독점과 대중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 초래되고, 생존권 실현을 명분으로 평등에만 집착하면 공산 러시아에서 나타난 것처럼 독재와 전체가 자유를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따라서 고하는 자유와 생존의 양자 모두를 중시하는 중도의 길을 선택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자유권은 정치적 생존권이며 생존권은 경제적 자유권"인 것이다. 고하의 이러한 생각은 식민지 조선의 당면한 현실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진행과정에서도 자유와 생존의

12) 위의 글, p.61.

공존이 불가피하다는 역사인식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자유권과 생존권을 주창하는 “양대사상(兩大思想)은 조(鳥)의 양익(兩翼)과 차(車)의 양륜(兩輪)과 같이 호상제휴(互相提携)가 되어 발전”할 것이다.¹³⁾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하는 다음과 같이 단언할 수 있었다: “자유권과 생존권이 표리가 될지언정 배치는 되지 아니할 것이며 병행이 될지언정 상치가 되지 아니할 것을 단언코자 한다.”¹⁴⁾

자유권과 생존권 사이의 관계가 1930년대 초반 식민지 조선의 상황에서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는 사실이 한편으로 놀랍다. 1917년의 러시아 혁명과 1930년의 세계 대공황에 따른 여파가 이념적으로나 경제생활의 면에서 식민지 조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고하의 시각이다. 고하는 자유권과 생존권 사이의 관계를 상호보완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음을 간파하고 이념적 대립에 기초한 민족운동의 내부 분열을 경계했다. 좌우의 대립이 민족의 단결을 해치고 이것이 독립을 위해 필요한 민족역량의 결집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고하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3. 맺는 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하의 경제사상은 합리적 개혁주의자의 노선이었다. 식민지 수탈체제라고 해서 민족의 생산력 발전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하는 생각했다. 그것이 단기적으로 일제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민족의 생산력 발전을 통하여 민족독립의 밑거름이 될 것을 고하는 확신했다. 소작제도의 개혁에 대한 고하의 생각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된다. 그는 지주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소작인을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생산의욕을 높여 소작인에게도 좋고 사회 전체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작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교육의 중요성을 고하는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교육이 민족적 자각을 일깨워 독립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생산활동의 과학화·합리화를 통하여 민족의 생산력 증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믿었다. 자유와 평등,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공존을 주장하며 어느 한쪽의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 것을 당부한 고하의 생각도 역시 매우 합리적인 처방이었다. 역사발전의 원리로 볼 때에도 그렇고 민족운동의 이념적 대립이 가져올 민족적 역량의 약화를 고려해서도 그렇다. 고하는 독립운동의 지도자로서 대내외의 정세 흐름을 멀리 내다보면서 당대의 시급한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법론의 차이로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그는 매우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견지했다.

이 글에서 살펴본 고하의 경제사상은 그의 죽음과 더불어 지금껏 묻혀 있었다고

13) “자유권과 생존권” (『三千里』 1932년 4월호), p.90.

14) 위의 글, p.91.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고하는 정치인이자 경제사상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고하는 경제에 관해 체계적인 사상을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누구도 한국의 경제사상을 연구하면서 고하를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또한 해방 후 거의 최근까지 일제시대의 한국경제에 관한 연구는 민족사관으로 지배되다시피 했다. 민족경제론으로 체계화된 이 시각은 일제시대의 한국경제를 일본의 통치기구와 자본으로 형성된 “제국주의경제”와 한민족의 생활기반이 된 “민족경제”로 양분하고 “전자의 확대가 후자의 왜곡 또는 위축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는 등 양자의 대항관계를 축으로 식민지 경제의 전개과정을 서술”한다.¹⁵⁾ 따라서 식민지 치하에서는 경제발전이 있을 수 없고 오로지 제국주의적 착취가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계량경제사학자들을 중심으로 식민지시대 조선의 경제성장을 계량적으로 밝히는 연구들이 산출되고 한국 경제발전의 기원을 일제시대에서 찾는 연구들이 등장하면서 일제시대의 경제사를 새롭게 조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한국의 경제사를 한말, 일제시대, 박정희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속적 과정으로 일관되게 파악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각에서 고하를 비롯하여 일제시대에 활약했던 정치지도자들과 경제사상가들의 사상을 복원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를 반복되는 단절로 점철된 잃어버린 역사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민족지상주의의 시각에서 보면 부끄럽고 덮고 싶은 역사일지라도 그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 오는 민족발전의 원동력을 찾아 민족사에 자부심을 갖게 하고 이를 온전히 복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진영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정치학 박사.

전 국민경제제도연구원, 세종연구소 근무.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경희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15) 김낙년, 『일제하 한국경제』 (서울: 해남, 2003), p.9.